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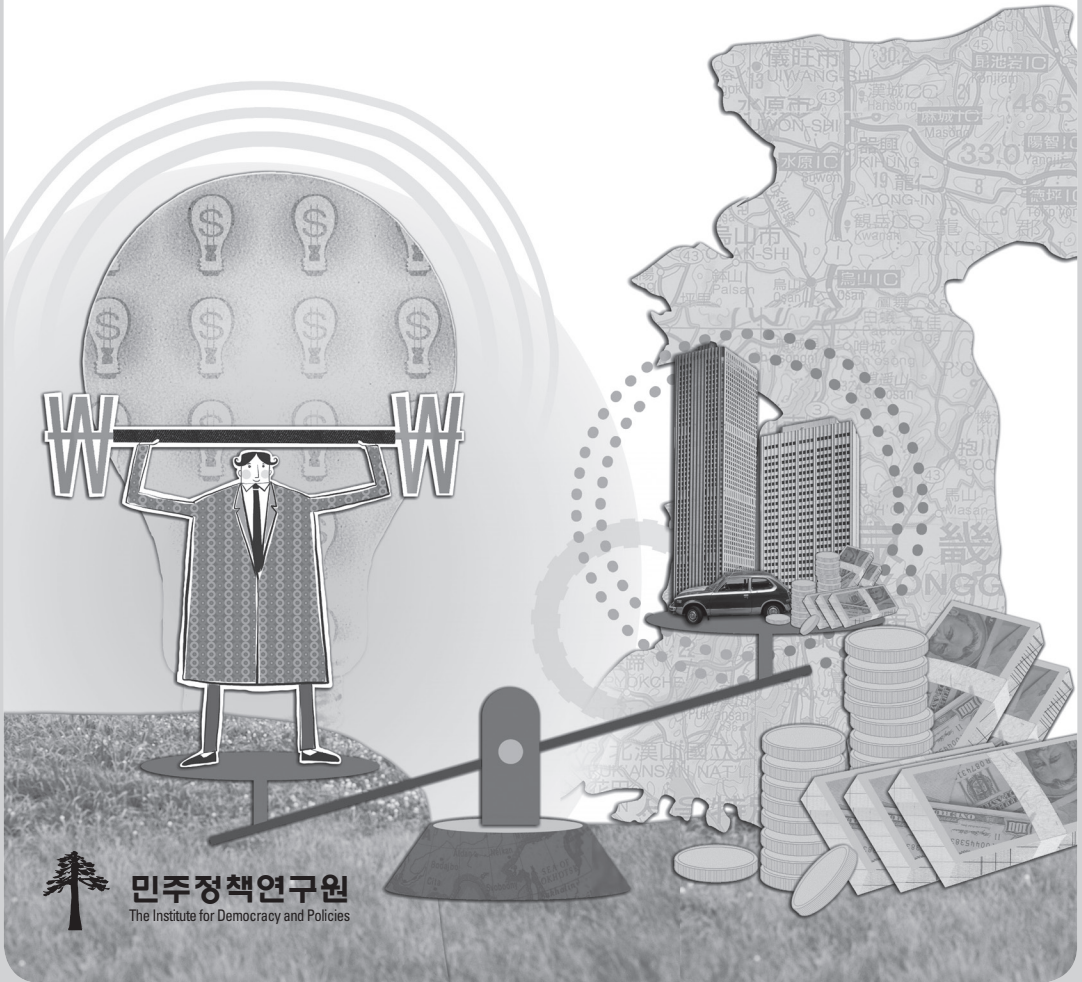
IDP 정책연구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IDP 정책연구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

## 요약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분배)개혁 없는 사회영역에서의 복지(재분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의 변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2) 양극화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편 복지의 요구, (3) 적하효과 소멸에 따른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 (4) 일시적인 회복 이후 다시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세계 경제의 위기 조짐은, 2012년을 앞둔 진보진영에게 경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4대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에 뿌리내린 문제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발생 이전을 포함한 30년 동안의 한국경제 변화과정을 압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고착된 핵심 문제와 원인을 구조화 하여 한국경제를 변화시킬 진보적 대안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중산층사회로의 도약 좌절)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전 역사적 시기를 통틀어 자본주의 틀 안에서나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소득상승 → 불평등 완화 → 내수기반 확대라고 하는 우리경제의 긍정적 측면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동구 사회주의 붕

---

과와 세계적 신자유주의 확대의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이 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일정하게 역량을 축적한 재벌 대기업들은 대우그룹의 '세계 경영' 구호가 상징하는 것처럼 해외로 팽창을 서두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과잉 차입과 과잉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막 시작된 금융개방 환경은 재벌 대기업의 팽창 욕구와 결합하여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1990년대 전반기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정착시키는 데로 연결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소멸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8~1996년 시기는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게 되는 특수한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종의 '이중 경제'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소멸하고 부정적 측면이 전면화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변화

외환위기는 한국경제를 1996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으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바꾸고 고용 유연화정책이 속속 도입되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국민의 실질 근로소득 수준을 떨어뜨리고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즉, 두터워 가던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 되었다.

재벌 대기업들은 내수시장 대신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철저

---

히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내 경제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국형 발전모델의 소멸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확대된 신자유주의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단의 팽창적 경영전략에 있었다. 외환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발전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 모델로 교체되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 성장모델이 확립되어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발생시켰다.

또한 한국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금융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여파로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반경 아래에 한국경제가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해온 것은 물론 소비시장의 지위까지 얻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 문제

2000년대 한국경제는 금융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까지 금융과 실물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영역에서는 (1)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2) 신용팽창에 의한 자산 거품이 형성된다. 실물영역에서는 (3) 기업의 주주자본주의적 단기 경영 관행이 등장하고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훨씬 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



서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국민의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이명박정부 3년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1998~2007) 기간 한편으로는 강력한 양극화 경향을 갖는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 확대에 온 결과, 지배계층의 강력한 저항과 투기경제에 발을 담근 시민(증권투자, 부동산투자)세력의 소극적지지 속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다. 시장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고 더 강력한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현재는 복지담론이 부상하면서 진보개혁세력에게 유리한 담론 지형이 형성되고 있으나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이 '복지의 양'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경쟁한다면 재정 문제, 증세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프레임 속에서 경쟁하게 되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막고 일차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복지의 재정 부담도 줄고 지속 가능성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현재 진보개혁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함께 경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발생시킨 3대 영역에 대한 규제를 선행시켜야 한다. 3대 규제 영역은 (1)자본 유출입 통제(국내 금융시장 규제), (2)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그리고 (3)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거품에 대한 통제다.

동시에 주요 영역에서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1) 금융

산업을 재구성하고, (2) 대·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하며, (3) 유연화로 치달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4) 민영화 추세에 대응하는 공공경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설계해야 하며, (5) 미국 유럽과의 FTA를 대체하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과 양극화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 무능한 정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진보 개혁세력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집권 대안 방향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연구단체·연구자와 공동 연구작업 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정책연구'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민주정책연구원 박정식 연구위원이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 Contents

I. 머리말 :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 변화 .....	1
II. 역사적 경험 :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 .....	3
III.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및 대외적 환경 변화 .....	11
IV. 2011년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문제 .....	17
1.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	17
2. 신용주도 버블경제 .....	21
3. 주주자본주의 단기경영 관행 .....	25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	26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	32
V.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	40
1. 2010년대 한국경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변화 .....	40
2. 시장(분배)개혁을 통한 복지(재분배)와의 통합 .....	41

VI. 맺는말 .....	51
참고문헌 .....	53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I 머리말 :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 변화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교훈

- 글로벌 금융위기는 범세계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줌.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1) 글로벌 자본 이동에 의한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 유출입 통제가 필요하고, (2) 내수기반이 안정되어야 세계 경제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 내용을 구성할 첫 번째 요소임.

## • 양극화 심화, 보편복지 요구 확대(복지 담론의 확산)

- 최근 복지 담론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고 압박과 사회 안전망 부족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특히 2008~2010년 경제위기로 중산층들과 서민들 사이에서 교육문제와 주거문제, 고용불안 등이 심각해지자 이것이 무상급식요구를 매개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줄 두 번째 요인임.

## • 적하효과 소멸, 재벌 대기업 개혁 이슈 부상

- 이명박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수출 대기업은 국내 경제와의 연계성 없이 해외 수출과 해외 생산으로 성장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됨.

- 복지담론과 재벌개혁 담론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사회의 양대 주요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이 포괄해야 할 세 번째 필수 주제임.

## • 위험요소 증대, 체감경기 악화

- 적하효과 소멸이라는 정책근간의 실패가 확인된 가운데, 수출대기업 성장과 국내 체감경기 악화의 간격이 커지고 있고, 이는 2012년 대선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글로벌 경제의 대외적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추가적인 물가 불안, 가계부채 위험성 증대, 전세가격 상승 추세 지속, 일부 건설사와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확대되고 있음.

• 이들 4대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에 뿌리내린 문제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을 포함한 30년 동안의 한국경제 변화과정을 압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고착된 핵심 문제와 원인을 구조화 하여 한국경제를 변화시킬 진보적 대안정책을 수립할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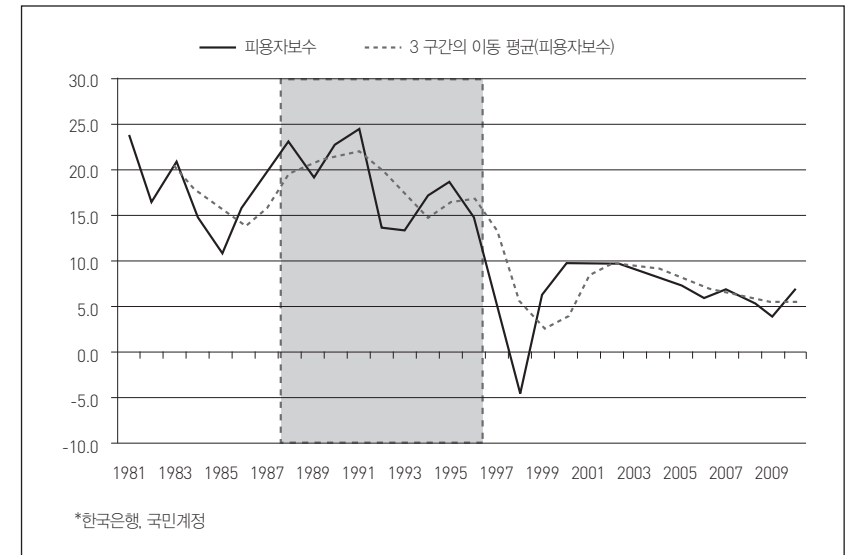
## Ⅱ 역사적 경험 :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

### 1.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 : 내수기반 확대

#### 1) 노동자 임금상승과 소득상승이 가장 빠르게 증가

- 시기는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8.3%였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이는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 4.2%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
- 일자리는 매년 50만 개 가량 늘어남. 평균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고용률(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1994년~1996년 기간 동안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61%에 근접함.
- 1989년에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 수가 200만에 육박하는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현재의 조직률 10%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
- 고성장 기조 유지, 노동조합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를 배경으로 노동자 임금과 가계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임.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명목상 피용자 보수가 매년 15~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그림 2-1참조)

그림 2-1 : (국민 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 보수 증가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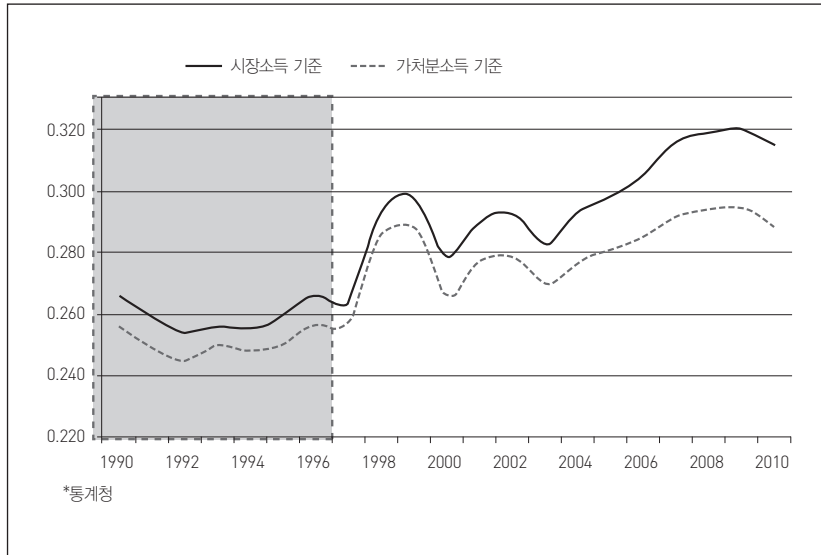


#### 2)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 완화

-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임금 몫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고 절대 분배율 값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0년대 초반에는 떨어지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2000년대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지속.(그림 2-2 참조)
- 결국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졌으며, 2011년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사회목표가 '불평등 완화,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라면 그 목표에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2: 지니계수 변화 추이(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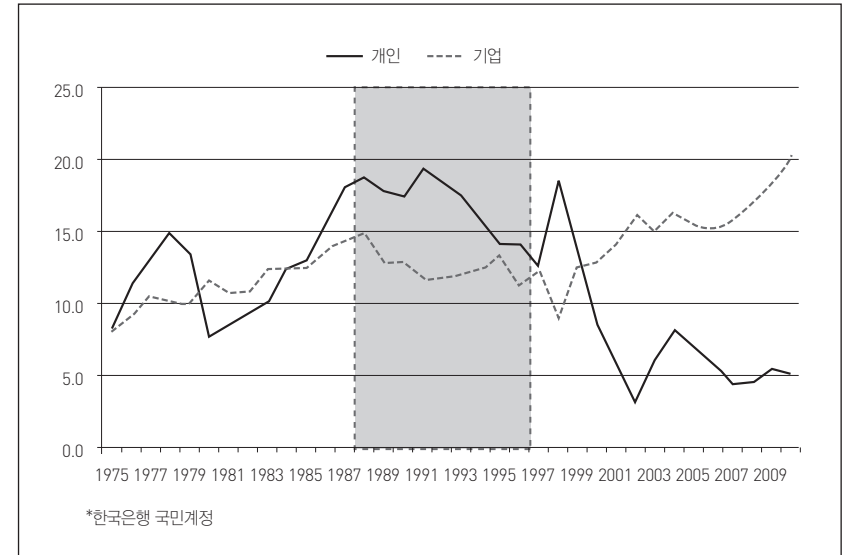


\*통계청  
\*도시 2인 가구 기준

### 3)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게 형성

- 소득 상승에 힘입어 가계의 저축률이 15%~20%사이를 유지하면서 기업 저축률을 크게 상회함. 반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 1996년까지만 해도 175조 원 정도로 2010년 가계신용 잔액 800조 원의 1/5에 불과했음.(그림 2-3 참조)
-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계저축은 극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기업 저축은 1990년대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빠르게 축소하고 내부 현금자산을 늘리고 있음.

그림 2-3: 개인과 기업의 명목 총 저축률 변동 추이



\*한국은행 국민계정

### 4)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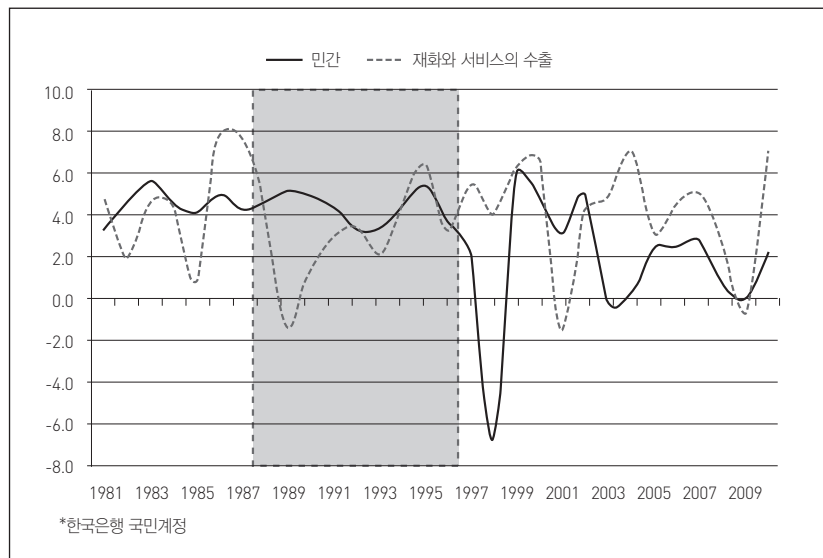
- 1990년대 상반기에는 부동산 매매 시장이 큰 상승 없이 일정한 가격 기조 유지. 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1999~2003년, 2005~2006년 두 번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서울지역 기준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올랐음.
- 주식시장도 대체로 종합주가지수 기준 600~1000 사이를 오가는 수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4~2008년 금융위기 시기까지 주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0포인트를 돌파한 바가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임.

- 결론적으로 1990년대 상반기는 실질적인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변동성이 2000년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 5) 국민 소득 향상에 기초한 내수시장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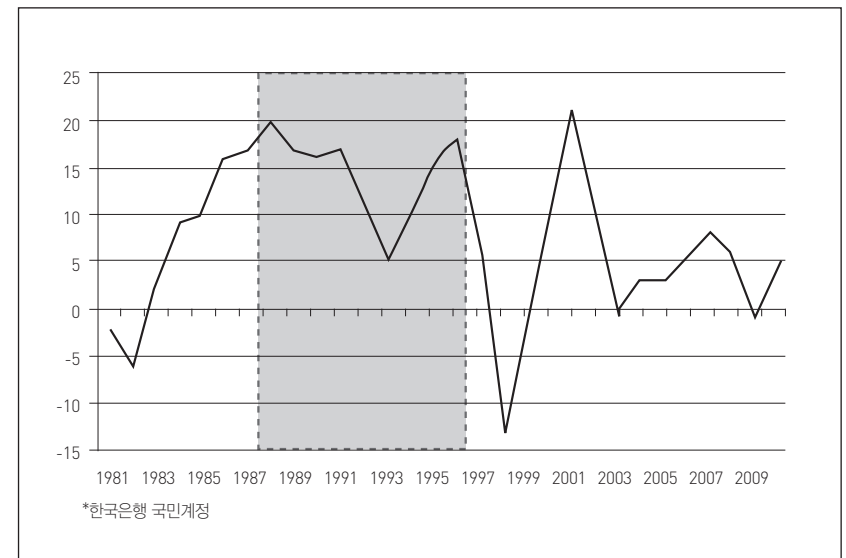
- 국민들의 소득과 저축의 상승으로 수출과 함께 민간 소비지출에 의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음.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수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았음(그림 2-4 참조)

그림 2-4: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의 성장 기여도 비교 추이



- 국내 민간 소비가 팽창하자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대함. 1988~1996년 동안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3.1%였음. 반면 2001~2010년 동안에는 3.8%에 불과함.(그림 2-5 참조)
- 재벌 대기업은 1990년대 팽창하는 내수에 의지해 성장을 해 왔지만, 2000년대부터는 수출과 해외생산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바꿈.

그림 2-5: 실질 설비투자(3년 이동평균)증가율 변동 추이



#### 6)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의 자본, 기술축적

- 국민의 소득 상승 → 구매력 상승 → 민간소비지출 증가 → 내수시장 팽창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도약의 계기로 작용. 재벌 계열의

주요 대기업들은 자본축적과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

- 그 결과 1980년대까지의 조립가공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에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했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첨단산업 방향으로 전환.
-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면서 정부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임.(1992년 재계 총수였던 정주영 현대 회장 대통령에 출마)

## 2.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부정적 측면 : 신자유주의 확산과 외환위기로 귀결

-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소득상승 → 불평등 완화 → 내수 기반 확대라고 하는 우리경제의 긍정적 측면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세계적 신자유주의 확대의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이 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도 확대됨.
-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1996년 OECD가입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금융 자유화를 서두름. 결국 무리한 금융시장 개방은 은행과 중금사들의 해외 차입 길을 터 주었고,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해외 팽창에 따른 자금 수요와 맞물리게 됨.
-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해외 자본의 자금 상환 압박이 아시아 전역에 번지자 곧바로 한국도 외환위기에 빠짐.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입 → 대기업의 과잉 차입과 투자 → 대기업의 부실 →

대규모 자본 유출 → 외환위기라는 경로를 따라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됨.

- 결국 외환위기는 한국경제를 1996년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분기점이 됨.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바꾸고 고용 유연화정책이 속속 도입되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국민의 실질 근로소득 수준을 떨어뜨리고 실질 구매력을 약화. ⇨ 두터워가던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
- 또한 기업금융 대신 소매 금융이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는 4%대의 성장률에 머무르는 대신 자산시장 거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시작함.
- 이 와중에 재벌 대기업들은 내수 시장 대신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철저히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구사함. 국내 경제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임. ⇨ 한국형 발전모델의 종료

## 3. 소결

- 1988~1996년 한국경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전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는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한국경제의 전 역사적 시기를 통틀어 자본주의 틀 안에서나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1987년 이전의 대외 의존 경제, 재벌 중심 경제, 열악한 노동 환경 등 기존의 부정적 측면 역시 198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음. 여기에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경제를 서서히 잠식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까지 축적하게 됨.
- 이런 점에서 1988~1996년 시기는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게 되는 특수한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종의 ‘이중 경제’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외환위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소멸하고 부정적 측면이 전면화 되는 것으로 결론)
- 결국, 1990년대 전반기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정착시키는 데로 활용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도입을 서두르면서 현재의 양극화가 본격화함.

### Ⅲ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 모델 및 대외적 환경 변화

#### 1. 한국형 발전모델 변화(신자유주의 모델 수용)

- (국가와 기업사이의 권력관계 변화 조짐)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온 재벌 대기업들이 일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경제력을 키우면서 국가 권력의 그늘을 벗어남. 국가와 재벌 대기업 사이의 권력

관계 변화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1960년대 이래의 국가주도 발전모델이 약화되었음을 의미.

- (자유시장 이념 확산 및 신자유주의 모델로 전환)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잘못된 개입(관치경제)이나 재벌의 후진적 경영 측면만이 부각되면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추진됨. 국가 역할 축소와 재정, 통화정책 변화, 기업 경영 방식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과 자본시장 자유화가 담론 경쟁에서 승리함.
- (금융시장의 급진적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추세는 199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주식 소유지분제한 철폐와 자유변동 환율제 도입으로 인해 완전히 자유화되고 개방 됨 ⇨ 이후 외국자본 유출입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함.
- (작은 정부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재정지출 축소, 물가 단일 목표제로의 통화정책 전환, 산업 정책의 사실상 폐지 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전환됨. ⇨ 국가가 수행해야 할 소득 재분배나 고용확대 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부로 전환됨.
- (단기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행태의 변화) 신자유주의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이 도입됨. 한편에서는 과배당 요구, 장기투자 기피, 주가 관리를 위한 현금 보유 확대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외주 용역 등 노동유연화가 도입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변화)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됨. 그 결과 노동 내부의 차이가 확대되고 노동

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 내부의 소득 분배구조도 악화시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함. → 내수 기반 약화를 발생시킴.

- (수출주도 성장모델 확대) 수출 대기업의 성장과 국내 내수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대기업의 해외발생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경제력 집중도 역시 강화됨. →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약화. 대기업의 경제권력 확대.
- (버블경제: Plutonomics)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매 금융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를 동원한 자산시장의 거품이 형성. →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부채의 지속적 팽창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누적시키게 됨.

[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발전모델 성격 변화

1988~1996	외환위기 이후
고용 안정성	고용 불안정성 → 비정규직 양산
평균적 소득 상승	평균적 소득 정체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 불평등 확대 → 워킹 푸어
높은 저축률 유지	낮은 저축률, 높은 부채
내수기반 확대 + 수출	내수시장 위축 + 수출 편향 기업성장
장기적 기업 전망 아래 투자 확대+과잉투자	단기 실적 위주 경영, 대외투자 팽창
경제와 기업에 대한 국가통제 잔존	기업 권력의 독립과 사실상 우위 형성
은행을 통한 금융조달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기업 금융 중심	가계 소매금융 중심 → 가계 부채
자본시장 통제 + 제한적 자유화 시작	자본시장 자유화 → 자본시장 변동성
자산시장 상대적 안정	자산거품 본격화 → 부동산 가격 폭등

## 2. 환경변화1 :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자산거품 형성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대 이후 시작된 금융 세계화가 극단을 치달으면서 부동산 거품을 촉발시키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거품이 붕괴되었다는 점.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 세계 GDP와 금융자산 규모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90년에 금융자산(43조 달러)이 GDP(21조 50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게 성장했고, 2006년에는 거의 3.5배가 되었음. 제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금융의 지배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음을 보여줌.
- 금융 내부에서도 무게 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함. 198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은행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27%로 떨어짐. 같은 기간 은행예금이 7.8퍼센트 성장하는 동안 주식시장이 10.4%나 빠르게 성장한 결과임.
-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명목적 가치로 보면 파생상품을 제외한 세계 금융 자산 167조 달러의 세 배인 477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함. ‘세계 GDP 48조 달러 → 금융 자산 167조 달러(파생상품 제외) → 파생상품 시장 477조 달러 구조’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임.
- 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2000년대 상반기의 장기 저금리 기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자금이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부동산 대출은 파생상품 기법에 의해 유동화 되면서 증폭되었음. 결국 2006년까지를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고, 연쇄적으로 금융거품 붕괴를 초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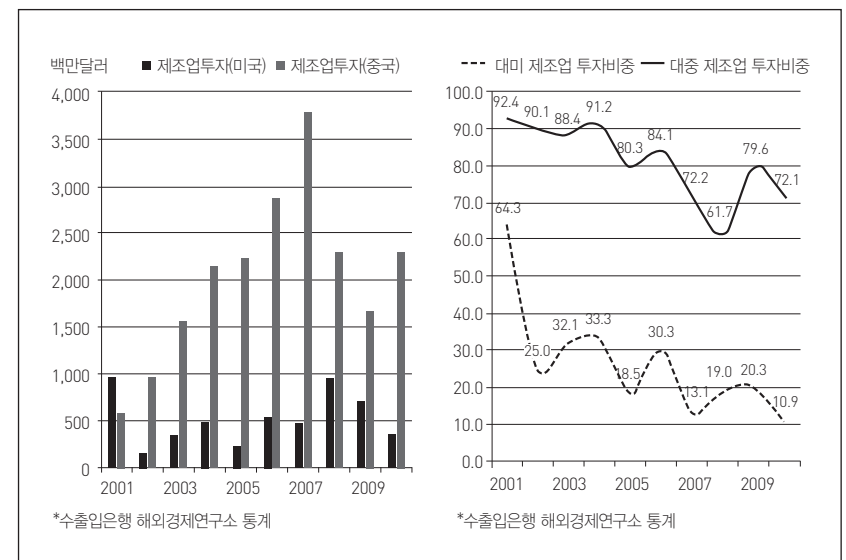


### 3. 환경변화2 : 중국경제의 부상, 중국효과에 의한 한국경제의 성장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중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부상임.
- 중국은 명목 GDP규모면에서 2010년 5.88조 달러로, 세계 2위 일본의 5.47조 달러를 추월함으로써 1968년 이후 40년 넘게 지켜온 일본의 지위를 무너뜨렸음.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로 2005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중임.
-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2011년 3월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섬.
-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실물경제와 상품 무역에서 중국경제와의 연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됨. 2000년대에 한·중 무역은 한국 실물경제 변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
- 2000년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수출 10%, 수입 8% 비중으로 정확히 미국 의존도의 절반에 불과했음.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수출 가운데 25%를 대중국 수출이 차지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됨. 수입도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마저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함.
- 2008년 상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 2년 동안 한국경제 GDP성장률 4.2% 가운데에서 그 절반이 넘는 2.2%는 대 중국 수출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산업연구원)
- 한·중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율이 700%에 달할 만큼 막대한 자체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반면 중국경제의 성장 여부에 따라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는 구조임.

- 2000년대 한국경제에게 중국은 해외 투자와 해외 생산기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됨. 특히 2007년 이후도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평균 70% 이상 제조업 투자가 유지되고 있음)(그림 3-1 참조)

그림 3-1 : 대미,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



### 4. 소결

-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1990년대 전반기부터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 추세가 점차로 확산 되었는데,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이 팽창 전략과 맞물리면서 과도한 해외 차입을 증대시켰고 외환위기라는 파국적 국면을 맞음. 외환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발전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

적 모델로 교체되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변화된 궤적이 지속됨.

-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됨. 하나는 금융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여파로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반경 아래에 한국경제가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해온 것은 물론 소비시장의 지위까지 얻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임.

## IV 2011년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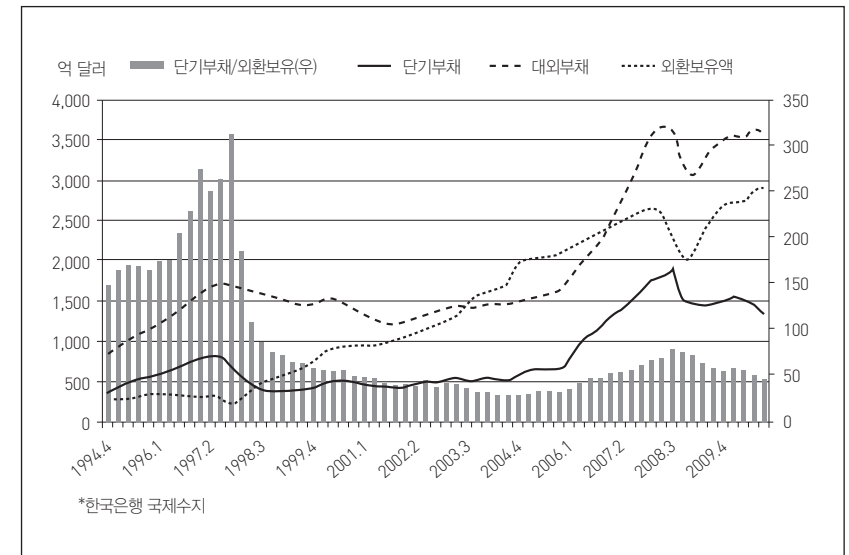
### 1.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 1)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경제

- 1990년대 전반기 외화 차입 자유화 등 부분적으로 외환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외화 차입이 증대하고 이를 통한 재벌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함.
- 그러나 이 조건에서 다시 환율이 평가 절상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성장률이 둔화되자 1997년부터 부채를 건디지 못한 대기업 부실이

시작되었고 차입된 외자의 일시상환 요구가 몰리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함.(그림 4-1 참조)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의존형 성장모델이 더욱 고착되면서 한국경제는 환율 변동에 훨씬 큰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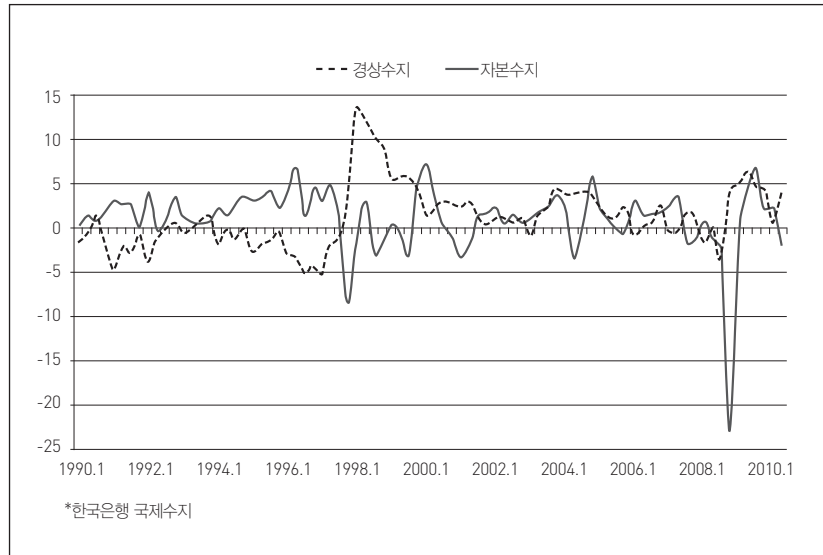
그림 4-1 : 한국의 대외 부채 변동 추이



-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는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방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각한 금융충격에 시달려야 했음. 자본시장에서의 외환 유출입 규모가 컸기 때문임.
- 한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풀린 외환을 매입하면, 시장에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됨.(통안 증권

에 대한 이자부담은 1997년에는 3조원 규모였으나 10년 뒤인 2007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7.8조 원)

그림 4-2: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변화 추이(단위 억원)



## 2)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 외환시장 자유화와 자본시장(주식, 채권시장) 자유화가 확립된 조건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은 곧 바로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됨. 외환위기 이후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평가 절하는 97년(외환위기), 01년(IT버블 붕괴), 04년(신용카드버블 붕괴), 08년(글로벌 금융위기) 네 차례 있었음. (그림 4-2 참조)

-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임. 이 가운데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 사이에 주로 순유입(구조조정 대상 기업들 해외 매각 등)되었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투자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국내 기업의 대외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자본 유출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접투자 보다는 파생금융상품투자를 포함한 증권투자(주식 및 채권투자)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기타투자(국내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및 외국인의 단기예금)는 금리 및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단기자금을 말하는데, 이들 자금은 특정 금융사건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이탈하는 것이 특징임.

	증권투자 (유입)	증권투자 (유출)	기타투자 (유입)	기타투자 (유출)
1990~1994	1.78	-0.4	2.12	1.58
1995~1999	2.9	-1.12	2.34	2.84
2000~2004	2.75	-1.23	1.52	1.96
2005~2010.2q	6.28	-6.22	3.18	2.31

\*GDP 대비 비중: 증권투자는 파생금융상품투자 포함

- 예를 들어 06년 1분기~08년 1분기 2년 동안 GDP 대비 평균 6%를 초과할 만큼 외국인의 단기 투기자금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지만 08년 4/4분기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GDP 대비 20.2%가 급격히 이탈(증권수지를 포함하면 50%에 달함)한 바가 있음. 그 결과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음.

###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 1998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 시행 이후 환율변동성은 뚜렷이 확대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최고조에 이름. G-20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일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이 0.37%로서 중간 수준인 열 번째를 기록했으나, 위기 동안에는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69%를 기록함.

	외환위기 이전 (’90.3~’97.12)	리먼사태 이전 (’98.1~’08.9.12)	글로벌 금융위기 (’08.9.15~’09.3)	’09.4월 이후
원/달러 환율	794.30	1,139.00	1,371.80	1,188.60
전일대비 변동폭	2.30	4.50	22.70	7.00
전일대비 변동률	0.21	0.37	1.69	0.58
내재 변동성	-	7.56	41.40	15.30

\* 인용: 한국은행(2011),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GDP 대비 비중: 증권투자는 파생금융상품투자 포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원화는 아세안 국가들보다도 변동성이 심했는데,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보다는 4배, 태국이나 필리핀 보다는 2~3배의 변동성을 기록한 바가 있음.

## 2. 신용주도 버블경제(신용팽창에 의한 거품형성 및 붕괴)

### 1) 자본유출입 변동에 따른 경기 증폭성

-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은 외부에서 발생한 거품형성과 붕괴 사이클이 국내 경제로 침투하는 고리로 작용함. 특히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은 은행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해외 단기의

채가 급등하면서 발생함.

[표] 기간과 형태별 주요 외국인 자본유입

구분	유입 형태	유입규모(억 달러)	GDP 비중
1994.2~1997.3	기타투자	517.6	13.7→21.7
1998.1~2001.4	직접투자	390.4	3.1→10.5
2003.2~2007.3	증권투자	3511.6	16.4→43.1
2006.1~2008.3	기타투자	1222.7	11.2→22.4
2009.2~	증권투자	2467.5	34.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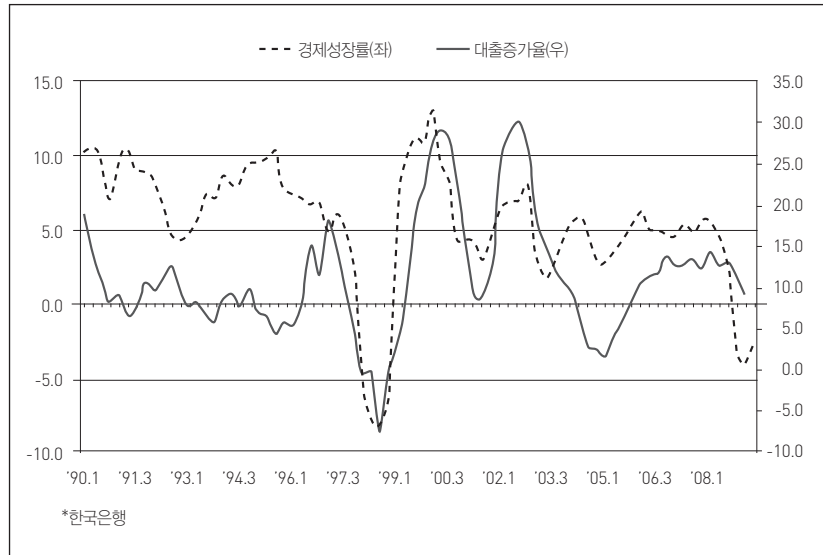
- 자본시장을 매개로 외부로부터 신용거품이 촉발되는 경우는,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 국내 신용 확장 → 자산시장 버블 → (위험 과소평가) → 민간소비/가계부채 증가/환율 평가절상 → 수출경쟁력 약화, 가계/금융회사 취약성 확대 → 통화 만기 불일치라는 경로로 전달됨.

### 2) 국내 신용시장 내부에서의 경기 증폭성

-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의 또 다른 공통성은 경기 활황기에 CD, RP, 금융채, 외화부채와 같은 은행의 시장성 수신(비예금성 부채)이 증가하면서 예대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데서 기인하기도 함.
- 즉, 담보가치 상승 → 리스크의 과소평가 → 느슨한 금융 감독(BIS 비율 확대, 대손충당금 축소) → 금융회사의 자산 확대 경쟁 → 금융회사의 신용확대가 반복됨.
-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및 수신 구조(시장성 수신

증가),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변화, 경제 전반의 금융화 추세에 따라 경기 동조성이 더욱 강화되는 특징이 있음.(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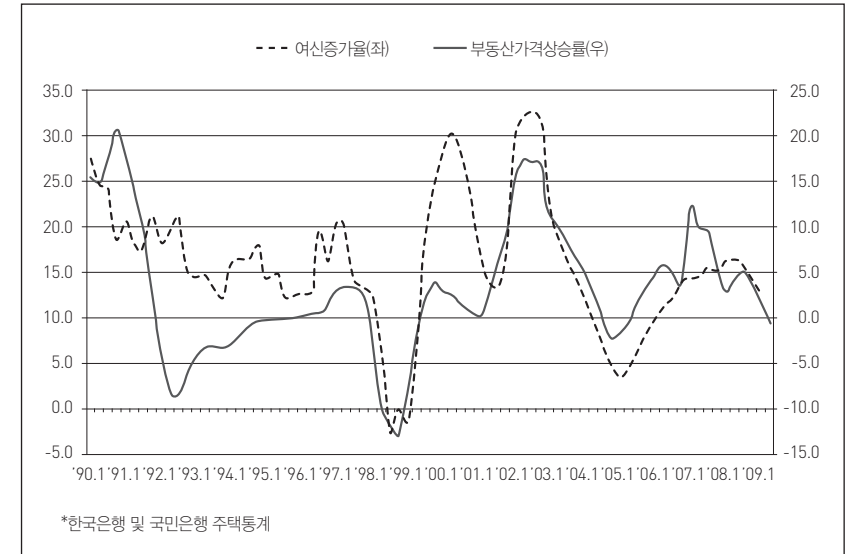
그림 4-3: 은행 대출 증가율과 경기변동의 관계



### 3) 자산시장의 경기 증폭성, 부동산 가격의 폭등

- 신용 공급의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자산(대출) 수요 증가 → 자산 가격 버블 → 담보가치 증가 +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대출능력) 증가 → 민간소비 증가라는 사이클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형성됨.(그림 4-4 참조)

그림 4-4: 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의 관계(명목지수)



- 2000년대 초반기에서 카드 대란 시점까지,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두 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음.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증가는 대체로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에 따라 발생했음. 이는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로 금융 공급이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신용팽창을 배경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자산 지니 계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서 알 수 있음.(그림 4-5 참조)



그림 4-5 : 자산 지니계수 변화 추이(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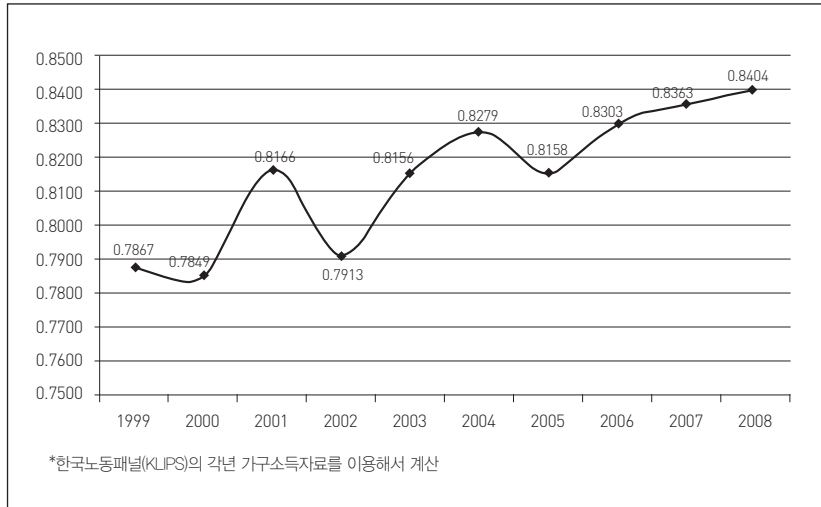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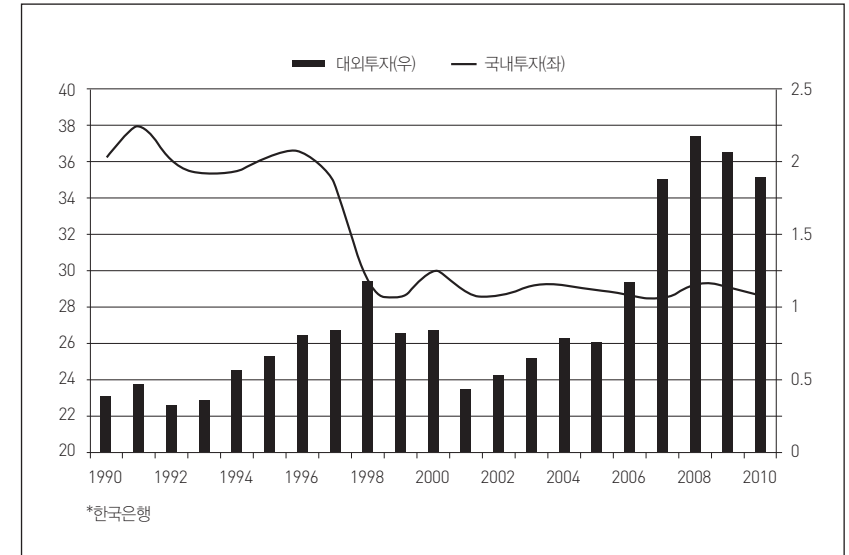


그림 4-6 : 국내 투자와 대외 투자 비중 변동 추이



### 3. 주주자본주의 단기경영 관행

- (배당률/배당성향 증가) 외국인 주식 소유비율 증가로 미국형 단기 주주 가치극대화 경영방식 도입됨. 그 결과 과거 사내유보를 통한 재투자 모델에서 주가부양중시 모델로(감량경영, 배당, 자사주매입), 배당률 증가로 (1997년 제조업 배당률 3.2%에서 2007년에는 15.31로 5배 증가), 경영자 보수 증가로 전환했고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나게 됨.
- (해외 투자 증가) 비용절감과 수익성 위주 경영은 해외투자를 늘어나게 했음. 그 결과 GDP에서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38%에서 2010년 28.6%로 줄어듦. 반대로 GDP에서 해외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까지만 해도 0.83%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2.17%까지 거의 3배가 증가함.(그림 4-6 참조)

- (기업가정신 쇠퇴)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신규 투자 보다는 인수 합병 선호, 사내 유보율 급증.

###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 권력화

#### 1)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개혁 평가

- 김대중 정부는 5+3 재벌개혁 추진. 2001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결합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제도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즉별경영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
- 그러나 주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경제력 집중 해소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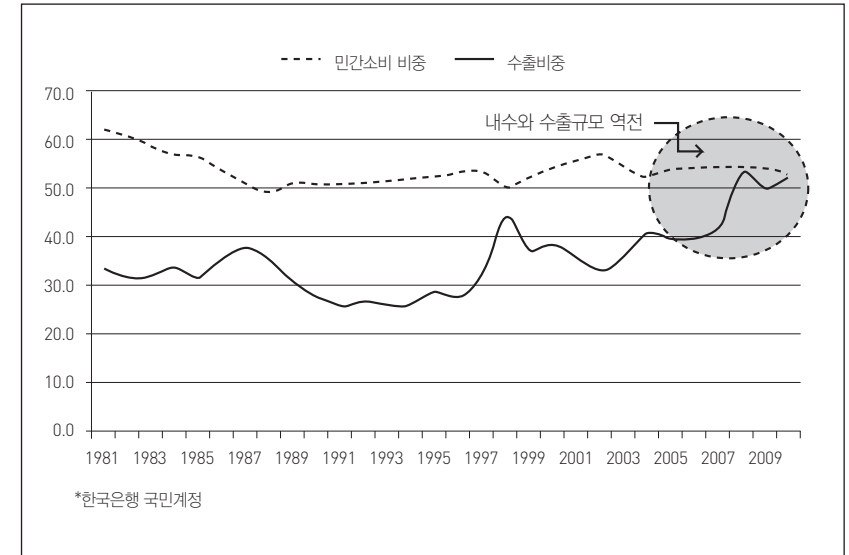
차적으로 취급됨. 한편 벤처산업 육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완화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벤처 거품 붕괴로 효과 소멸.

- 참여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의 유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함.
- 순환출자 구조나 소수지분에 의한 총수 지배력 등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함. 그러나 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

## 2) 수출편향 대기업 성장모델 고착

- 외환위기 경험은 외환보유고 축적을 위한 수출전략을 부각시켰고 이를 위한 환율정책이 수립됨. 또한 고용 불안으로 국내 소득여력이 부진하면서 국내적 내수기반이 약화되자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위주의 경영전략을 강화하게 됨.
- 그 결과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2010년 2분기 이후부터 수출규모가 민간소비 규모를 앞지르게 됨. (2010년은 연간 기준으로는 민간소비 비중은 52.5%, 수출비중은 52.4%)임.(그림 4-7 참조)

그림 4-7 :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와 수출 비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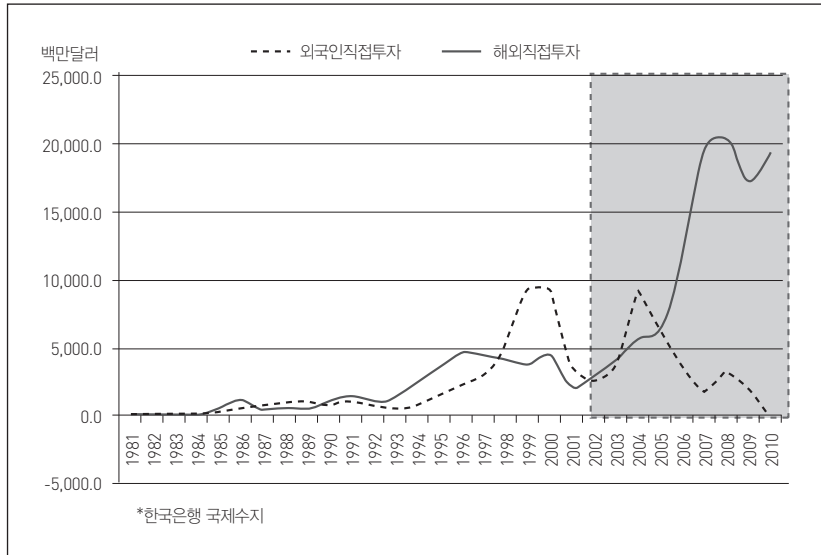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미국의 70.6%, 독일의 57.9%, 일본의 58.6%보다도 매우 낮은 비중임. ⇨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특히 2008년 경제위기로 더 확대되었음.

## 3) 해외 생산기지 구축과 대외투자 확대

- 재벌 대기업 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주력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2002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남. (그림 4-8 참조)

그림 4-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자와 외국인의 국내직접 투자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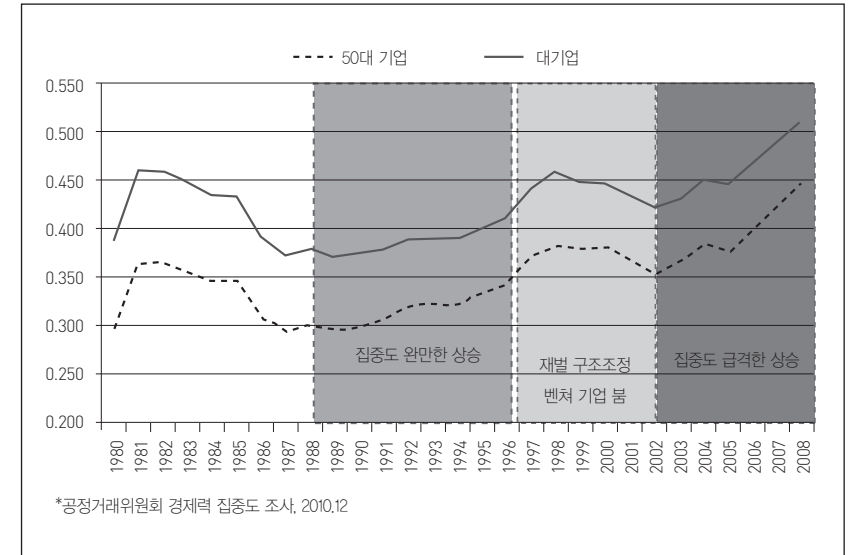


- 현대차 그룹의 경우, 2009년 기점으로 해외생산 자동차 대수가 국내생산 대수(내수용 + 수출용)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함. 이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과 수익 확대가 국내 고용이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내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단절

#### 4) 경제력 집중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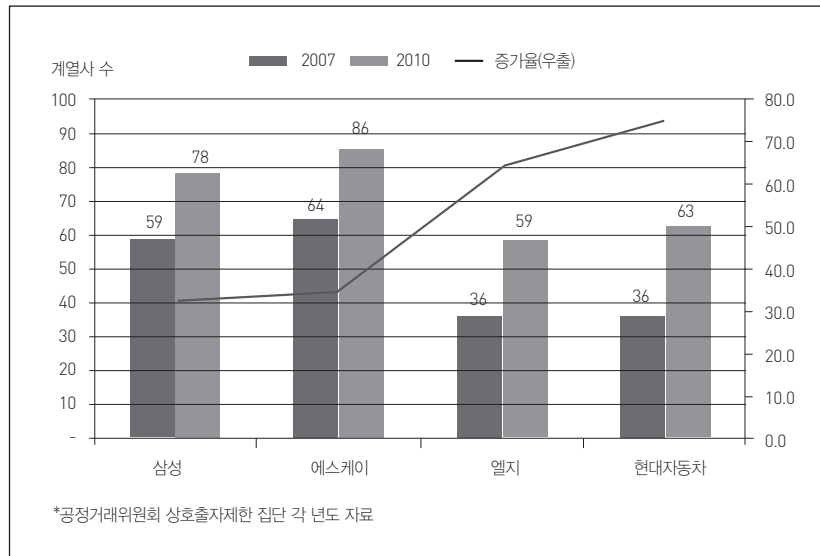
-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몰락, 대기업 빅딜과 구조조정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벤처 열풍에 힘입어 다시 급격히 하락함. 그러나 2008년 말 현재 상위 50대 기업은 집중도 44.7%, 100대 기업은 51.1%로서 1980년대 이래 최고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그림 4-9 참조)

그림 4-9: 총 출하액 기준 일반 집중도 변동 추이



- 특히 4대 그룹(삼성, 현대차, LG, SK)의 총 매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603조 원에 이르러 전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 대비 50%를 상회함. 2008~2010년 동안 연 평균 16.2%의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기록함.
-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열사 수도 급격히 늘어남. 2007년 대비 계열사가 최소 30%이상 늘어났음.(그림 4-10 참조)

그림 4-10 : 4대 그룹 계열사 수 변동 추이(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 2008년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에는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 대기업 법인세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유지 정책 등 '3대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화되었음.
-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에서 주요 기업과 기업 집단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으며 2008년 대기업 친화적인 이명박정부 집권과 금융위기로 인해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함. ⇨ 재벌개혁의 주요 목적이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으로 변하게 됨.

#### 4) 통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화

- 한국의 재벌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 LG, SK를 주축으로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경제권력'으로 부상했음.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면서 수출비중과 해외생산 비중을 키웠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지해 줌.
- 반면, 국민들은 1990년대와 달리 경제의 금융화, 고용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산 거품까지 확대되면서 이른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 함. ⇨ 재벌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 시스템

##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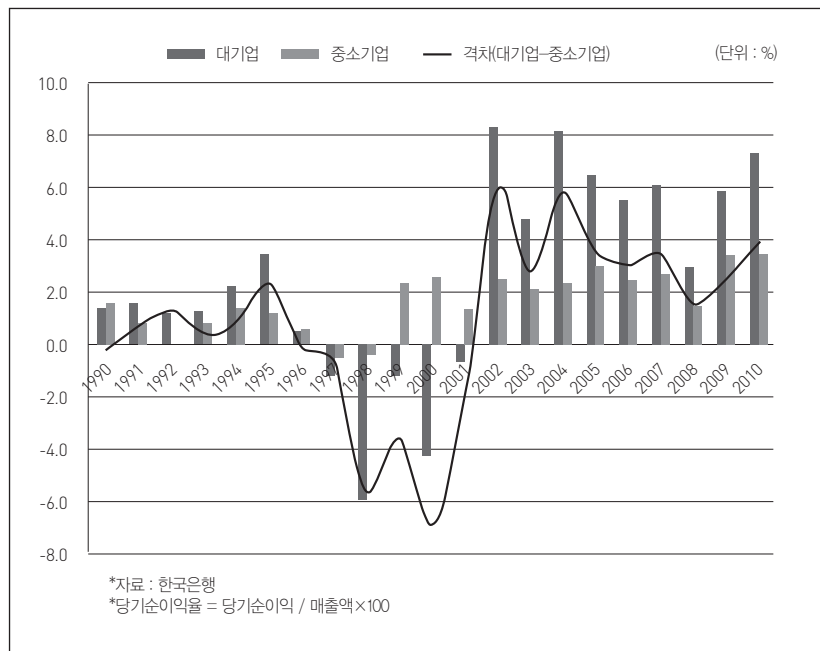
### 1) 한국경제 양극화 확대 구조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이 발생시킨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임. 양극화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내부(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 노동 내부(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장의 적하효과는 사라졌지만, 양극화의 적하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 ⇨ 2000년대 한국 사회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

##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금 비용을 줄이는 한편,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부품 원가 비용을 떨어뜨림.
- ‘전속 거래’등의 형태로 국내 중소기업의 43%정도가 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해외 부품조달 움직임은 하청 중소기업의 이익률 하락으로 귀결됨.(그림 4-11 참조)

그림 4-11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순이익률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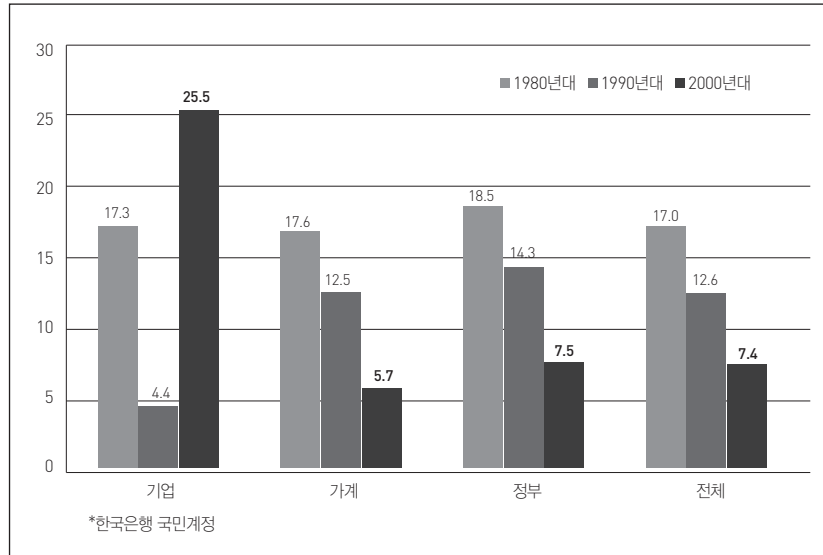
- 그 결과 전 산업기준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87%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은 절반 수준, 생산성은 1/3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로, 노동자의 양극화로 전이됨.
-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 중소기업에로의 고급 인력 유입 곤란 → 기술개발 능력 약화 → 저 생산성 → 저 수익성 → 저 임금 → 저 기술력 유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구조화시킴.

## 3) 기업과 노동(가계)사이의 소득 양극화

-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수익률 양극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노동 사이의 성장 과실 분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됨. 2000년대 10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25.5% 인데 비해 가계소득은 5.7%에 그치고 있음. 그 결과 가계소득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그림 4-12 참조)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해외 생산과 해외 아웃소싱, 그리고 고용 유발이 적은 IT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대량 양산,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으로 노조 협상력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4-12: 국민 처분가능 소득 중 기업, 가게, 정부의 증가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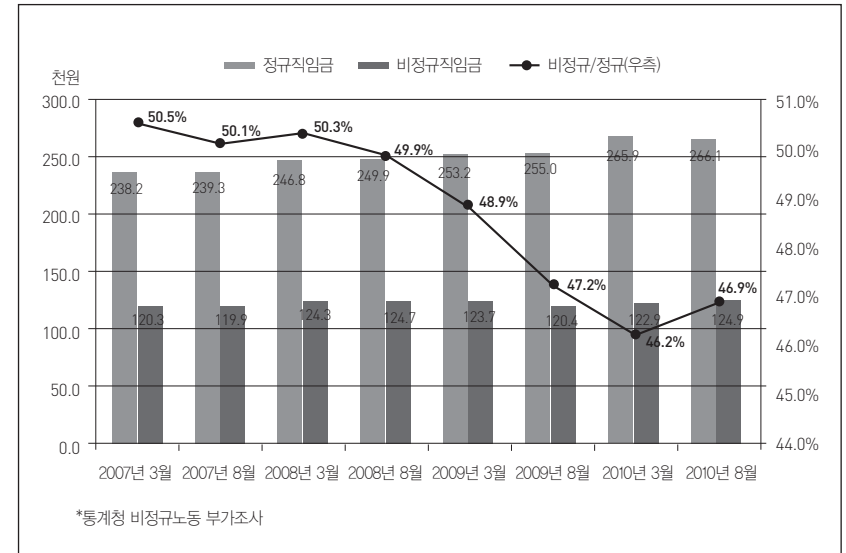
- 기업과 노동사이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은 1996년 62.5로 최고점에 올랐다가 외환위기로 급격히 추락했고 최근 경제위기로 재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2010년 59.2%)

#### 4) 고용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적, 질적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노동내부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축으로 심각하게 발생함.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56% 이상(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기준)까지 올라가면서 정점에 이르다가 이후 지표상으로는 점차적으로 양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8월 이후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까지 감소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함.(그림 4-13 참조)

그림 4-13: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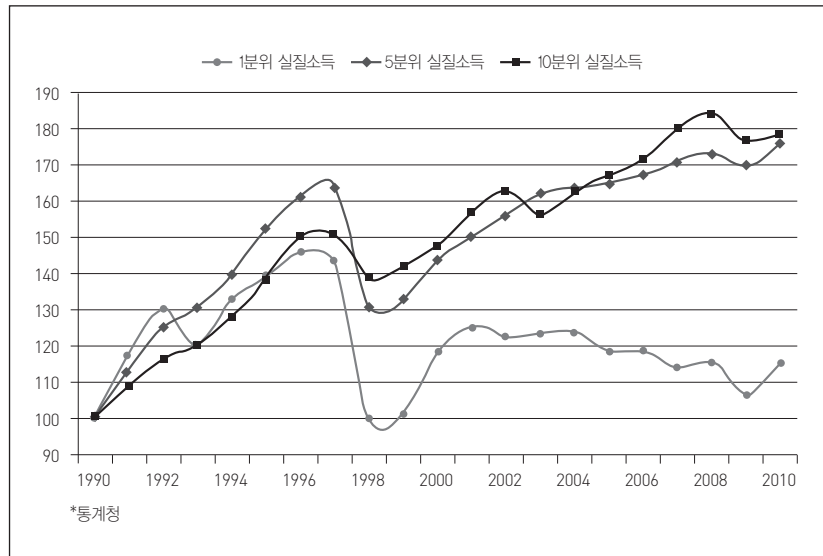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격차, 임금격차 뿐 아니라, 복지 수혜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현재 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비율은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은 임금외적인 부분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5) 소득의 양극화와 소득분배율의 악화

- 1990년대는 5분위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10분위 가구보다 컸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위 10% 고소득층으로 소득상승이 집중. 반면 저소득가구는 2000년대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폭이 큼.(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그림 4-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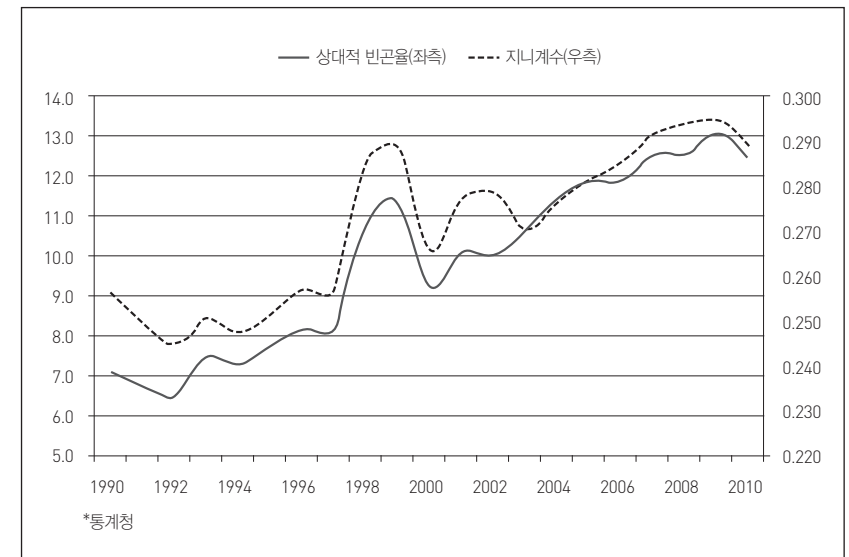
그림 4-14: 소득 계층별 실질소득 증가 추이(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 최근 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빈곤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결국 고용의 양극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를 증대시켰고, 이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가구의 소득불평등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짐.(그림 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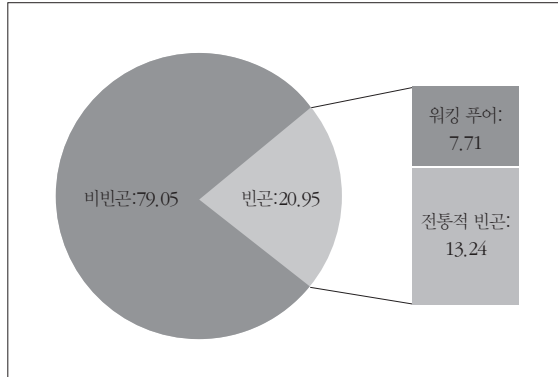
그림 4-15: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 6) 빈곤의 확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워킹푸어(근로빈곤층) 문제를 낳고 있음. 2010년 1분기 현재 국내 워킹푸어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7.71%임.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워킹푸어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그림 4-16 참조)

그림 4-16 : 2010년 1분기 워킹 푸어의 규모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고용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더욱 크게 했고 이는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함께 중산층의 비중을 줄이는 소득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옴. 더욱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증대와 함께 아주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대하였고, 이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확대시킴.

## 6. 소결

- 2000년대 한국경제는 금융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까지 금융과 실물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됨.
- 금융영역에서는 (1)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2) 신용팽창에 의한 자산 거품이 형성됨. 실물영역에서는 (3) 기업의 주주자본주의적 단기 경영관행이 등장하고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훨씬 심

한 구조로 진행됨. 그 결과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악화되었음.

한국경제의 구조 문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자본시장 변동성 증대, 환율 변동성 증가, 금융위기의 강도와 빈도 증가
② 신용주도 버블경제로 전환	소매 금융 확대, 가계 부채 증가와 위험성 증대, 부동산 거품 형성, 전세가격 상승
③ 주주자본주의 단기 경영 관행	비용절감형 인력운영, 배당성향 상승,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 유인 확대, 사내유보 확대, 인수합병 선호
④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수출 의존형 경제성장 고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 확대, 통제 받지 않는 경제 권력화, 적하효과 소멸
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비정규직, 근로 빈곤층 발생, 청년 실업 확대

## V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 1. 2010년대 한국경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변화

- (금융 세계화) 2000년대를 지배했던 금융세계화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시스템의 붕괴위기를 맞았음.
- (중국의 부상)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부상해온 중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환경에서 그 속도가 오히려 더욱 빨라졌으며 향후에도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외부 환경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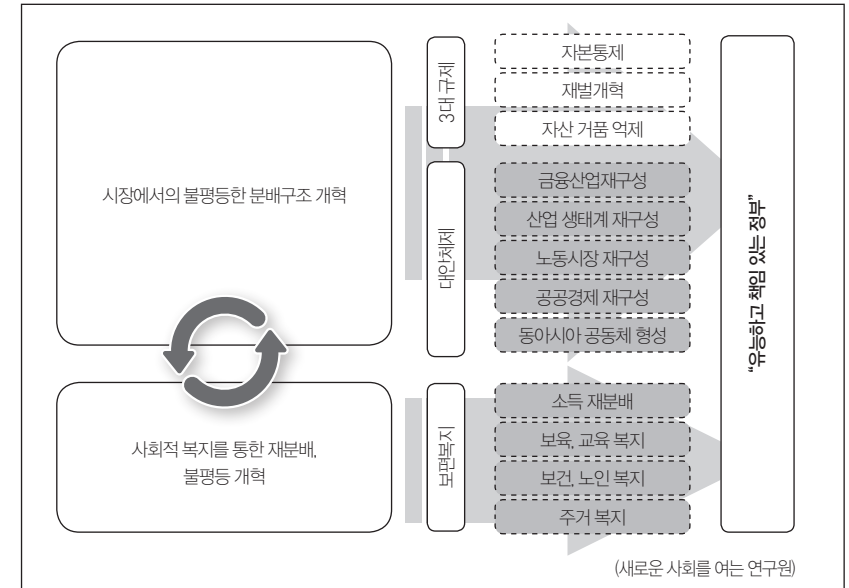
- (인구학적 변화)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적 파장으로 인해 2006년 30~40대 주력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데 이어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한 인구까지 감소할 것임.
- (환경, 에너지 문제 대두) 환경에 대한 고려가 현실화되고 기존 방식의 에너지 공급체계도 점점 임계점에 가까워 오고 있음.
- 향후 진보의 정책대안은 2010년대의 시대의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주요 외부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분배)개혁을 통한 복지(재분배)와의 통합

### 1) 기본방향

- 체감 경기의 악화 지속, 고용 불안 심화, 가계 부채의 증가, 시장 소득의 정체 등 향후 수 년 동안 경제여건의 개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 담론만으로는 점점 더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임.
-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시장 자체의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함. ⇨ 진보가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개혁 담론을 제시해야 할 이유가 됨.
- 따라서 진보의 경제, 사회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재분배 강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세부적 규제안과 대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함.(그림 5-1 참조)

그림 5-1 :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 2) 자본 유출입 통제와 거시 안정성 정책

- 시장자율을 통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 + 규제완화(de-regulation)를 통한 금융주도 성장전략(금융허브 전략) 에서 규제강화(re-regulation)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및 실물과 금융의 균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자유화, 규제완화, 대형화, 민영화 → 자본통제, 규제강화, 안정성, 공공성 강화
- 외환시장 자유화 정책 → 외환(거시)건전성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 자본통제의 선택적 적용(capital management technique)
  - 통화정책의 자주성 회복(금리정책이 환율에 종속되지 않도록)

-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가 초래하는 위험성 유형 및 과속방지턱(Speed bumps)
- 통화위험(Currency risk) :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 NDF(역외선물환) 시장 폐지, 통화선물거래세 도입
- 자본유출 위험성(Flight risk) : 점증적인 자본유입 규제 :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비예금성 원화부채에도 부담금 부과, 주식파생상품(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거래세 조기 도입
- 금융 취약성(Fragility risk) : 부동산시장 규제 체계 강화, 신규 금융파생상품 개발 허가(positive 방식으로 전환), 금융감독체계 개혁

### 3) 독과점 규제와 재벌 대기업 집단 개혁

-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
- 시장 지배적 사업자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 고발권' 완화 내지는 폐지, 공정위 조사권 부여, 기업분할 명령제,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독과점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서비스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금융 자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설립 허용 금지, 출자 총액제한 제도의 재도입 검토, 상호 출자뿐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 검토.
- 하도급법 개선
-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대기업과 납품 단가를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교섭권'을 부여 ⇨ 공정거래법 상의 담합금지에 대

한 예외 인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자율 준수'가 아닌 법과 제도로 명문화.

### • '기업집단법' 제정

- 재벌 대기업 집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자체를 하나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함으로써 그룹 경영의 편익에 상응하는 법적인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독일 사례)

### • 현행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 확대.

-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인 합의와 요구'가 강제되어야 함. 이명박정부 들어서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자체 조사가 현저하게 떨어졌음.

-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절대 권력화. ⇨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최근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과 체감 경기 정체로 인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개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여건의 예의 주시.

### 4) 자산거품 억제

- 자산 거품 위기에 대처하면서 자산 재분배 정책 수립.
-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공동체/개인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 ⇨ 예컨대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가격 하락 시 일정 단계마다(신고가격에 비해 10% 하락할 때 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무제한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 군 단위 공동체계획과 아동발달계획 등을 통하여 단위별 저축을 중앙정

부·도정부가 지원하여 공동체/개인 자산 형성 지원.

- 가계 부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단기 변동 금리 구조로 ‘장기 고정금리 환승’으로 전환. 금융권, 특히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제 2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 경쟁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 채무 비율이 과도한 저소득 층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채무조정’을 준비할 필요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 차입에 의한 소비를 소득에 기초한 소비로 전환해야 함.

## 5) 주요 대안 시스템 설계 방향

### ① 금융 산업의 재구성

- 금융회사의 규모경쟁과 고위험 투자 규제 : 반독점 강화를 통해 예금의 시장 점유율 한도 제한, 투자은행의 자기 자본투자 한도 제한, 비예금성 외화 부채뿐 아니라 원화 부채에 대해서도 은행세 부과, 메가뱅크 보다 는 지역 밀착형 은행 시스템 구축, 금융 허브 구상 등을 폐기하고 산업과 금융,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화벽을 설치.
-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저소득층 소비자신용, 학자금, 주택대출 중심의 서민금융 전담하는 서민은행 설립 ⇨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공동체 기금 구성.
-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의 관련 부서 통합하는 ‘금융상품 안정청’ 설립 : 금융파생상품 설계 및 유통 과정에서 사전 심사 및 테스트(positive 방식),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시정 및 폐기 권한 부여.

- 금융에 대한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포함한 ‘거시건전성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 집중 관리. 한국은행에 금융 감독 및 검사권 강화.

### ②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

- 재벌 대기업 집단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 된 현재의 하청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재편. ⇨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구조 해소.
-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을 모델로 한 지역별/산업별 중소기업 네트워크 체제 구축 : 기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에 중소기업 전용 “리얼 서비스센터”(산업별/지역별 중소기업 전용 사업서비스 센터) 설립 및 확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서비스 지원 센터화, 국책연구소·부처별 연구센터를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여 혁신기술 공급.
- 지자체 별로 중소기업 위주 산업정책 수립(현재의 WTO 규정 우회) - 대기업, 외자 유치 정책의 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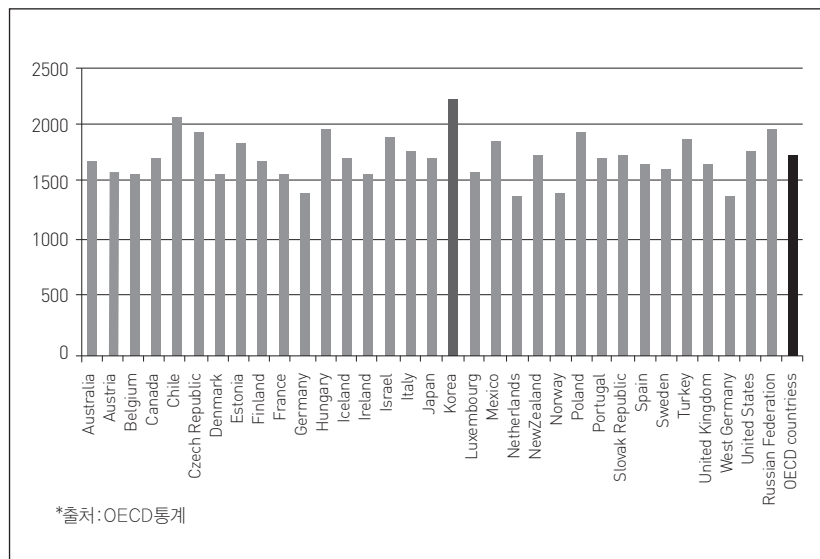
### ③ 노동시장의 재구성

- 국가의 거시경제운용의 목표를 GDP 성장에서 고용률 성장으로 전환하고 고용률 목표제 도입.
- 산업별로 비정규직 해소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 재벌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단속을 통한 대-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 격차 축소, 지역·산업별 ‘노사정 전략대화’를 통한 ‘사회연대 합의제’ 형성
-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대폭 향상, 최하위 계층 임금소득을 보장하여 임금상승이 확산(ripple effect)될 수 있도록 함. 법정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Kaitz index) 30% 이상 보장.

그림 5-2: 연평균 노동시간 국제비교(2009년 기준)



#### ④ 공공경제의 재구성, 사회적 경제의 확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정책(특히 의료 및 교육)의 중지 - ‘신공공관리론’에서 ‘공공가치관리론’으로.
- 각 분야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가치를 확정된 후 가장 효율적인 공급 방

식을 결정. ⇨ 특히 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형성과 공공서비스의 결합 방식을 새롭게 형성.(예컨대 건강보험시스템-의료생협을 통한 주치의 제도 도입, 철도-협동조합형 렌트카를 통한 철도이용 확대)

- 사회적 경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또는 일반법) 제정.
- ‘사회적기업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비정규-저임 노동 양산체제를 사회적 경제 형성의 계기로 전환.(국가 재정은 기업의 노동자 임금 보전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계 형성, 또는 그를 위한 기금 형성에 사용)
- 지역 단위로 내셔널 트러스트 형태의 자연자원 보호 및 관리 시스템 형성 ⇨ 개발과 토목건설이 아닌 자연자원 보호가 최대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음.

#### 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환율정책을 지양하되 아시아권과 공동보조로 신축적 고정환율제로 이행.
- 한-EU FTA의 경우 국가별 ISD 도입을 저지하는 협상에 진력하면서 협정의 효과에 주목.
- 한-미 FTA의 경우 전면 재검토 후, 한-EU FTA의 결과를 보면서 재재협상.
- EU를 모델로 현실적인 ‘동아시아 공동체’형성 추진 - 금융협력, 환경-에너지 협력, IT협력, 철도-고속도로 협력 등 분야 별로 추진.

## 6) 소득 재분배 정책 - 가계 중심의 소득 재분배 정책

- 직접세의 누진적 성격 강화하기 위해 초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잡아야 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음. 2004년 대비 과표 8000만원 이상 원천징수 대상 고소득자는 14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과표 8000만원 이상 종합소득 대상 고소득자는 94% 증가했음.

[표] 과표 기준 원천징수 고소득자 현황

	합계(명)	8000~1억	1~2억	2~3억	3~5억	5~10억	10억 초과
2004	41,000	17,000	18,000	3,000	3,000		
2005	53,037	22,231	22,626	4,020	2,531	1,629	
2006	68,591	28,626	29,826	4,991	3,028	1,519	601
2007	89,197	36,655	39,435	6,405	3,665	2,084	953
2008	100,136	40,755	44,080	7,555	4,347	2,463	936
2009	100,391	39,513	45,085	7,804	4,739	2,418	832

-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함.
- 현행 법인세는 2억 원 초과 기업은 일률적으로 22%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2009년 기준 과표 500억 초과 413개 대기업(전체 0.1%)이 법인세의 63.1%를 납부(과세소득은 전체의 58.6%)함.

## 7) 사회통합 복지지출 확대

- 개인적 책임성(가족복지) → 사회적 책임성(공공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함.
- 가족(취약가구와 부유가구), 여성(남성과 여성), 노동(취업자와 실업자/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금(청년세대와 노년세대) 중심 사회통합 정책
- 현재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 : 예산 규모가 매우 작고, 집행 또한 비효율적임.
- 2008년 한국의 국민 부담률 26.5%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 OECD 평균 국민 부담률 : 1975(29.4%), 1985(32.5%).
- 2005년 사회복지지출 비중 8%, OECD 평균(24.4%)의 33% 수준임. 동일한 경제수준인 나라들(뉴질랜드, 포르투갈)은 복지지출 비중이 18~24%를 보임.
- 감세정책 이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하락(2010년 조세부담률은 19.2%)
- 복지지출 확대 → 복지 학습효과 →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선호 변화 → 증세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 → 증세 → 복지지출 확대의 복지와 민주주의의 누적적 선순환 과정 필요함.

## VI 맺는말

- 한국경제는 1996년 까지만 해도 일정수준의 불평등 완화와 내수기반이 존재했으며 충분히 다른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었음.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부터 확대된 신자유주의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단의 팽창적 경영전략으로 외환위기라는 파국을 맞음.
- 외환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발전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교체되는 분수령이 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 성장모델이 확립되어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발생시킴.
-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됨. 하나는 금융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여파로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반경 아래에 한국경제가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해온 것은 물론 소비시장의 지위까지 얻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임.
- 결국 2000년대 한국경제는 금융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훨씬 심해지는 등 금융과 실물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됨.
- 그 결과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악화되었음.

결국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는 ‘저소득층 < 고소득층, 노동 < 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구조화 되었고 양극화의 한쪽 최극단에 재벌 대기업 집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쪽의 극단에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민주 정부 10년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생산적 복지’,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정책기조로 하면서 일정하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시도 했으나 정책 의도와 달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졌고 경제 사회정책에서 민주정부 집권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 형성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 담론을 보수가 주도’(이명박 정권의 집권)해왔으나, 2010년 이후 ‘복지담론으로 진보의 주도성’이 돋보이기 시작했음. 그러나 체감 경기의 악화 지속, 고용 불안 심화, 가계 부채의 증가, 시장 소득의 정체 등 향후 수 년 동안 경제여건의 개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 담론만으로는 점점 더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임.
-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시장 자체의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함.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과 양극화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 무능한 정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함. ⇨ 진보 개혁세력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집권 대안 방향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Chang, Park & Yoo(1998)**,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z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Crotty & Lee(2001)**, Economic Performance in Post-Crisis Korea: A Critical Perspective on Neoliberal Restructuring.

**Crotty & Lee(2002)**, Is financial liberalization good for developing nations?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e 1990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Crotty & Lee(2008)**, Was IMF-Imposed Economic Regime Change in Korea Justified? The Political Economy of IMF Interven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Epstein, Grabel(2003)**, Capital Management Techniques in developing Countries: An Assessment of Experience from the 1990's and Lessons for the Future.

**Grabel(2004)**, Trip Wires and Speed Bumps: Managing Financial Risks and Reducing the potential for financial crises in developing economies.

**ILO(2011)**, Global Wage Report 2010/11.

**Kotz(2007)**, Contradictions of Economic Growth in the Neoliberal Era: Accumulation and Crisis in the Contemporary U.S.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Kotz(2010)**,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of 2008: A Systemic Crisis of Neoliberal Capit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Onaran & Stokhammer(2005)**, Two different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ies: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in Turkey and South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Palley(2009)**, America's Exhausted Paradigm: Macroeconomic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Great Recession.

**Panizza(2010)**, The Financial Crisis of 2007-9 and Emerging Countries: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Central Banks in The Brazilian and Korean Economies.

**Seguino(1999)**, The investment function revisited: disciplining capital in South Korea,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UNCTAD(2011)**, Employment,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

**한국은행(2009)**, Opening to Capital Flows and Implications from Korea, *Working Paper No.363*.

**한국은행(2011)**,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BOK 경제브리프*.

---

# 민주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안내

## 2011년 IDP 정책연구 시리즈

- 2011-01**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발전모델: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호
- 2011-02**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박순성·김종욱
- 2011-03**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이진복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 2011-04**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김동영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2011-05**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장환석  
전략적 구상
- 2011-0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홍현익
- 2011-07**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문병주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 2011-08**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영필
- 2011-09**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은옥
- 2011-10**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영국
- 2011-11**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
- 2011-12**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김용익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

**발행일** 2011년 10월 12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

---